

데스크 시각

누리과정 예산 해법은 없나



장 필 수
사회부장

요즘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는 아무래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일 것이다. 열린우리당 바람 이후 12년 만에 아권의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고 그 핵심에 호남이 있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을 잡아야만 아권의 주도권을 쥔수 있다는 생각에 신당 세력과 더민주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아권의 일당독재에 지친 지역 유권자들에게 오랜만에 주어

진 관전의 재미다. 총선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정부(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다. 그렇지만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지켜보는 마음은 편치 않다. 선거에서야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들의 적절한 경쟁이 필요하지만 취학전 어린이 교육비 부담

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책임 회피일 뿐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일부 교육청들이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으면서부터다. 당시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은 교육시설인 만큼 교육청 예산으로 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여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도 시도 의회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거부하면서 보육대란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야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곳은 전국에서 4곳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4곳은 진보 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다 보니 보수 성향의 정부와 진보 진영 간 기싸움으로 비치기도 한다. 양측 간 갈등은 최근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예산항목을 공개

하며 여력이 있는데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청들은 교육청대로 교육부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호도하고 있다며 물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예산 집행구조가 복잡한 측면도 있다. 유치원비는 교육청에서 곧바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는 데 반해 어린이집 원비는 시·도 등 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탓에 행정기관이 누리과정 논란에 끼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교육감·시도의원·시도지사 등이 연관되는 구조이다 보니 자연스레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셈이다.

누리과정은 원래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처음으로 도입한 무상보육 정책이다.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후 대상을 순차적으로 3세까지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10월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돌려

놓았다. 교육감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시행령을 들어 정부 예산으로는 못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

결국 죽어나는 것은 학부모다. 원비 지원이 안 되면 당장 광주·전남에서만 8만 90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자기 돈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정쟁과 이해관계로 꼬이고 꼬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 해법은 없을까. 재정부측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 만큼 증세가 근본 대책이겠지만 우선은 재정의 효율적인 분배가 중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방비만큼 제대로 감시해도 해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부의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차원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성장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저출산이고 저출산의 원인이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아닐까 싶다.

/bungy@kwangju.co.kr

은펜클럽

장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를 보며



한 국 한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작년 2월 미국 현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이야기다. 그는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의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 당시 폭설로 눈이 많이 쌓였는데 케리 장관은 집에 앉았고 대통령을 수행해 사우디를 방문 중이었다. 하지만 한 시민이 장관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고발했고, 벌금 50달러를 부과했다. 그것을 알게 된 케리 장관은 잘못했다며 벌금을 내겠다고 했다. 이는 한 나라의 법이 분명히 살아있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보통 자기 집 앞 눈을 집주인이 치워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는 눈 치우지 않아서 벌금

을 물렸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더군다나 공무를 수행 중인 장관에게 벌금 물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의 본질은 준법정신이다. 이렇게 늘 일상 속의 생활법규라도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지킨다는 정신과 실천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국가라고 평가받는 미국을 만든 것이리라.

우리를 되돌아본다. 상당수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온갖 법을 지키지 않아 큰 비난과 함께 고발, 해임되며 형사처벌이 일상화해 되었다.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에서 대부분 위법·탈법임이 확인되고 있다. 몇 해 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정원장과 당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등이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우연히 알지였을까?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만 했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법의 존재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분단의 현실에서 병역이 불확실한 고위 공직자들이 군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로, 훈시할 때에 “당신들이나 잘해”하며 비웃었음지도 모른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행정 사법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중에서 외국국적 취

득으로 병역면제 사례가 18명이었다. 한 간부 아들들의 캐나다 국적취득과, 지자체 산하단체장 아들이 스위스 국적취득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고위 공직자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는데 아버지가 어찌란 말이나?”며 비굴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고 있는데 국적 이탈 및 상실자 수는 총 1만2677명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직자들은 병역비리뿐만 아니라, 야공직자, 수상한 재산신고와 형성과정 의혹, 편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 방사체 및 무기관련 비리 등 여러 분야에서 불법을 행했다. 또한 각종 기관들의 성과급 챙기기과 보너스 만들어 주기, 시간외수당 홀쳐먹기, 거짓출장과 방만한 예산집행, 법인가드 함부로 쓰기, 해외연수의 비리와 거짓 보고 등 쉴 수 없는 부정, 탈법 등의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또한 올 4월 총선 정국에서 ‘권보살수’에 능한 정치꾼들의 ‘이합집산’, ‘동분서주’하는 일

또한 추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소위 ‘갑’의 위치와 ‘양지’에서 군림하고 있는 ‘비리 공화국’에서 그들과 함

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릴 더욱 서글프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큰 열매를 거뒀다. 2015년에 발표한 세계 GDP(달러)에서 우리는 캐나다(1조 6155억달러) 다음으로 11위(1조 3929억달러)이며, 1인당 GDP는 25위의 일본(3만 3223억달러), 쿠웨이트(3만 2720억달러), 이탈리아(3만 594억달러)에 이어 세계 28위(2만 8338억달러)이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과인가? 작은 한반도의 남쪽(면적 세계 109위)에서 5100만명(세계 26위)이 이룬 피땀의 열매로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당당하지 않은가?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준법정신으로 생활하며 서로 배려·상생하여 청정한 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해가 되길 바란다. 또한 올 9월 말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결영란법)’도 아예 필요 없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광주가 선진정치의 일번지로 거듭나려면



권 성 옥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해 4월13일은 우리나라의 20대 국회의원 뽑는 날이다.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자신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이 선거구 획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춤한 상태다.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 : 1에서 2 : 1로 변경하도록 입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2016년 1월 중순이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고 여야간 다툼만 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선거구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보이는 당 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아직 많이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의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일 것이건만 선거구와 다른 입법사항을 연계시켜 처리하려고 하는 점이나,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거래를 하듯 조율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지경이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현역이 아닌 예비 후보자들이며, 그중에서도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어 해 거래를 하듯 조율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지경이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현역이 아닌 예비 후보자들이며, 그중에서도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어 해 거래를 하듯 조율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지경이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국회

의 선거구 미획정에 대해 항의하고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설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사가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하였고, 그들의 정경이나 공약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맞추어 입장표명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정치 현실에 실망하는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다가 선거철이 되면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등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려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방식에 대해 투표로서 그들에게 국민의 의사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촛불집회를 통해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고 우리네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

을 때 모든 국민이 같이 아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 의견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투표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광주는 항상 야당의 표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투표가 이루어질 때는 야당의 표밭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야당의 공천이 국회의원이 되는 수순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이전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이다. 기존 야당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창당되는 것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기존의 정치인들을 보며 그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기러기처럼 옮겨가는지 의심이 들 때도 많다. 아권의 표밭으로 인식되던 광주에서 아권 후보자들에게 무조건 지지표를 주기보다는 인물과 공약에 따라 투표하고, 책임을 묻는, 발전한 선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광주가 선진정치의 1번지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호남 출신 첫 민선 농협 중앙회장 기대 크다

제 5대 민선 농협 중앙회장에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세 번 지낸 김병원(63) 씨가 선출됐다.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인 데다 농업 현장을 훤히 꿰고 있는 인사여서 지역 농민들의 기대가 크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한국 농업 그 중에서도 특히 전남 농민들이 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임기 4년의 농협 중앙회장은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조합원 235만여명, 자산 약 400조 원, 31개 계열사, 임직원 8800여 명의 거대 조직을 대표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고, 조직 내부 문제도 간단치 않아 신임 회장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3번의 도전 끝에 꿈을 이룬 김 회장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 발효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에 타격 타격 완화와 활로 모색이다. 그동안 관세 인하가 없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급증해 왔다. 이런 터에 FTA까지 겹쳐 국내 농산물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중국 농산물 범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기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농협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농협이 영농 교육, 자금 지원, 통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우리 농업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다행히 김 신임 회장은 그동안 수익 증대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농협의 구조를 개혁해 설립 목적에 최대한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식이 됐든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바란다. 아울러 임기 동안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 서민 올리는 요금체제 개편을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통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심번호’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들이 과중한 요금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다. 안심번호는 택배·콜택시·대리운전 등 주로 생계형 종사자들이 이용하는데 최근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사들의 서민을 위한 요금 체제 개편이 절실하다.

‘안심번호’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이동사가 만든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 번호다. 통신사에 따라 월 1000~2000원을 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지난해 5월 이동 3사가 내놓은 무제한 통화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번호가 통화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부가 통화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동 3사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월정액 이상의 부가통화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 제공 통화량을 넘기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월정액이 있기는 하지만 90% 이상을 안심번호로 거는 택배 종사자들에게는 무제한 통화 혜택이 큰 의미가 없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동사가 월정액 3000원을 내면 매달 300분의 ‘050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직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가 적다고 한다. 또 하루 300통의 전화를 거는 택배 종사자에게는 추가 300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실적은 증가했다.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인해 이동사의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늘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과 단통법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이동사들은 수익 증대에만 급급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한 요금 체제 개편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정치 시즌에는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소모된다. 기본적으로 선전과 선동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동원된다. 음악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들이 자주 애용한 선전 수단이었다.

히틀러는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한 만큼 정치적으로도 철저히 이를 이용했다.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독일인 우월주의를 뇌리에 주입시키기 위해서였다. 나치 정권의 압제에 시달린 지휘자 프루트벥글러도 히틀러와 괴벨스를 위해 지휘봉을 잡아야 했다.

한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나의 조국’(1981년 발표)은 ‘국민가요’였다. 중학교 때 못모르고 흥얼거렸던 이 노래에는 ‘독재’를 영도력(領導力)으로 생각했을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스며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영광된 새 조국에 새 역사 창조하여/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 주세”

전두환 정권의 홍보곡으로 지목되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1983년)은 국민을 ‘희망 고문’한 노래였다. “...저마

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이 노래에는 달리 보면 섬뜩한 대목이 있다. “전두환 정권이 원하면 뭇민지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대중가요는 정치인들의 선거 로고송이나 캠페인송으로 본격 동원됐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국회의원의 후보는 DJ DOC의 ‘DOC와 함께 춤을’을 ‘DJ와 함께 춤을’로 개사해 표심을 얻는 데 활용했다. 2000년 총선에서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라는 노랫말이 반복되는 이정현의 ‘바꿔’가 인기를 끌었다.

오는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예란의 ‘백세인생’이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근 이 노래를 로고송으로 쓰려 했다가 원곡자가 곡 사용료로 5억 원을 제시하자 포기했다고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가요에 정치적 구호를 심으려는 탐욕이 워낙에 심습하다. 로고송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변화도, 구원도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윤영기 문화미디어 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